

KMI 동향분석

VOL.174

2020 November

발간년월 2020년 11월(통권 제17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주문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협력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공유경제, 청년귀어인의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야...

이호림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holiml@kmi.re.kr / 051-797-4720)
강영은 어촌어항연구실 전문연구원
(yekang@kmi.re.kr / 051-797-4563)
천재영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oceanloving@kmi.re.kr / 051-797-4538)
전효주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thesocial@kmi.re.kr / 051-797-4564)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swpark@kmi.re.kr / 051-797-4562)

어촌사회는 신규인력 유입이 적고,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나타난 귀농·귀어 사회현상에 주목하고, 특히 해양수산부는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등 귀어인의 초기 정착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귀어인수는 6,682명으로 2015년 1,073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으며, 39세 이하 청년층은 19.0% 내외 수준으로 어촌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예비청년귀어인은 어선, 어장 등 어업 인프라와 주택 등에 소요되는 약 1억 7천만 원의 정착자금과 정보부족에 따른 어촌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을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은 어촌사회에 청년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착 이후 안정화까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업인프라와 빈집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 모델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유경제로 과거 대표적인 활동인 ‘두레’, ‘품앗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오늘날은 유희(잉여) 자원을 활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공유경제는 ICT 기술과 사회혁신 등 스마트화 전략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카카오키퍼, 쏘카(SOCAR), 위워크(Wework) 등이 대표적인 국내 공유경제 모델이다.

수산어촌분야는 진입장벽이 도시,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창의적인 공유경제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는 어업인 및 예비귀어인을 대상으로 어선임대를 통해 어선현대화와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어선리스사업’을 2002년부터 도입하였다. 일본수산청은 2015년부터 약 480억 엔을 투입하여 약 3,000척의 어선리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어업경험이 없는 청년귀어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내 지자체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어선, 어장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공유경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 ‘청년어선임대사업’은 근해어선 2척, 연안어선 6척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관내 신규어업인에게 10년 간 임차(연간 0.5% 임대료)하고, 감정평가액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은 2017년 불법어장 정리를 통한 신규어장 개발로 총 41명의 신규어업인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귀어인을 전문어업인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모델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ADDress는 농어촌지역 빈집을 도시민의 니즈변화에 맞춰 빈집 또는 리모델링한 유희 별장을 무제한으로 내 집처럼 쉬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다자요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숙박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농어촌민박과의 갈등 야기로 인해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전문가, 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 활용사례와 같이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정착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이해당사자 간 갈등문제, 규제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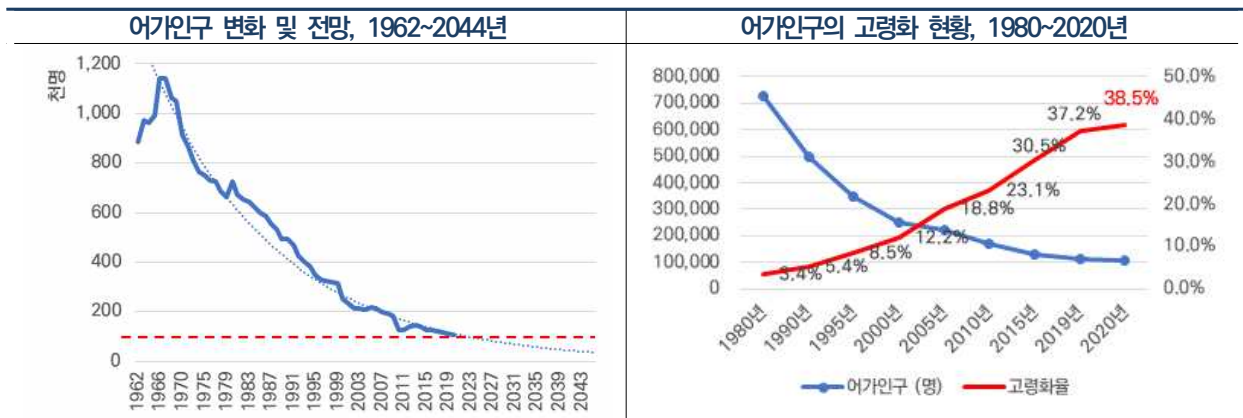
어촌사회는 전통적으로 어업공동체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 온 탓에 귀어귀촌 등 신규 인력이 유입되는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청년 예비귀어인이 어선, 어장 등 어업인 프라와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정보의 기회에 제약이 많아 공유경제를 통해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정책 사다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촌사회의 유희자원(어선, 어장, 주택 등) 실태조사와 공유경제 활용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가 서둘러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어선 임대사업’과 ‘청년어장 공모 사업’의 성과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칭) 『수산업·어촌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의 기득권 형성과 제도적 상충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등 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어촌의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촌사회에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사람을 중심으로 한 특단의 정책도입·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어촌, 귀어인수 지속적 감소 추세

■ 어촌사회의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 대두, 특단의 사람중심 정책 필요

- 지난 60년 간 한국사회는 산업화·도시화 등 압축성장(Compressed Growth)으로 인해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 나갔고, 특히, 어촌지역은 1967년 114만 명에서 2019년 10만 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주로 청년층이 이동하였고, 반대로 신규인력의 유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5년 이후 어촌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최근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촌사회는 지역소멸 위기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그림 1. 어촌사회의 인구변화 및 고령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 정부·지자체의 귀어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귀어인은 190명(19.0%) 내외 수준

-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에서 전출보다 전입인구가 많아지는 사회현상이 나타나면서 2013년 이후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융자 등 귀어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귀어인수는 6,682명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 1,073명을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면서 2019년 95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 39세 이하의 청년층은 19.0% 내외 수준으로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임
- 특히, 39세 이하 청년귀어인의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의 7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¹⁾

표 1. 어촌사회 귀어인수 현황(2013-2019)

(단위 : 명,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귀어인수(a)	690	978	1,073	1,005	991	986	959
39세 이하 귀어인수(b)	150	186	207	188	195	177	182
비율(b/a)	21.7	19.0	19.3	18.7	19.7	18.0	19.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청년귀어, 어업인프라 투자비용과 주택마련에 어려움 발생

■ 청년귀어인 준비과정 중 어선·어장 확보와 주택마련 등 현실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존재

- 귀어를 통해 어촌사회에 정착한 청년어업인은 어선이나 어장 등 어업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창업비용과 주택마련 등에 평균 1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기 투자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²⁾
- 예비 청년귀어인은 창업과 주택마련 등 초기자금을 마련하는데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선(허가어업)이나 어장(면허어업), 주택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어선 허가정수 제한, 내만에 포화상태인 면허어장 등 어촌사회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초기 창업자금과 정보력이 부족한 예비청년귀어인이 어업인프라를 확보하는데 현실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어업인프라를 공유하여 진입장벽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수산·어촌형 공유경제는 진입장벽이 높은 어촌사회에 청년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착 이후 안정화까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프라와 빈집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 모델과 활성화가 필요함
- 공유경제 도입은 무엇보다 소유가 아닌 공유·임대라는 방식을 통해 기본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예비귀어인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어촌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

1)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내부자료.(2013-2016년 귀어인 업종별 종사현황)

2) 박상우·이호림·이상규, 2017, p 101

공유경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개념으로 확대

■ ICT 스마트 기반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등장은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서민들이 물건을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공유에서 비롯되었음
- 과거의 일반적인 공유경제 개념은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로 정의 되었으나 이후 여러 경제학자들의 의해 여러 측면에서 재정의 되었음³⁾
- 보편적인 의미의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서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휴자원이란 물건뿐 만 아니라 시간, 노동력, 공간 그리고 재능 또한 이에 해당됨⁴⁾
-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미의 공유경제 활동으로 ‘두레’나 ‘품앗이’등을 들 수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가 가계경제의 하락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중고거래를 통한 공유경제가 활성화 됨
- 최근에는 유휴자원을 공급자와 수요자간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축된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로 정의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에 기반한 숙박 및 교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공유경제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교환경제로부터 시작된 경제질서가 공유경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기반한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된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나 스킬 등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경제로 진화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공유플랫폼 국내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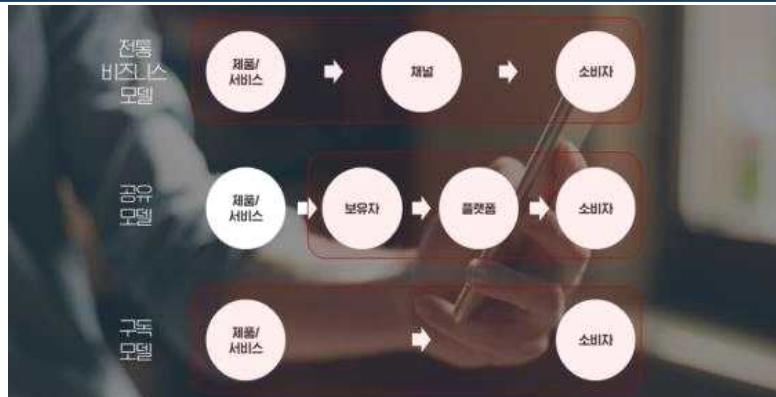
자료 :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1010006797>)

3) 정보통신신문, 공유경제가 시장 성장 견인.. 기존산업 보완 효과도(<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85>)

4) 네이버 블로그, 공유경제의 현황과 그림자(<https://blog.naver.com/hyoun1202/221470554689>)

- 과거 기성세대에 의한 물물교환 형식의 전통적 공유경제 방식에 비해 최근의 공유경제는 스마트기술에 익숙한 ICT 주력 소비층인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음
- 또한, 청년실업 등 사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ICT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일정 이용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경제 모델을 통해 경제주체가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전통경제, 공유경제 그리고 구독경제



자료 : Platum 외부기고 자료(<https://platum.kr/archives/139184>)

■ 농어촌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성 중심의 공유경제 출현

-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매칭 지원 사업으로 2003년 이후 지원되기 시작함
- 해당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지자체 주도의 공유 모델로서 농업경영비 절감과 이용률 제고 효과를 인정받아 국비 지원 규모와 개소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
 - 국고 지원을 향상: 04년까지 30%, 05년 이후 50%
 - 사업 개소(누계): (‘09) 134→(‘10) 195→(‘11) 220→(‘12) 250→(‘13) 293→(‘14) 336→(‘15) 379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상호 협조로 작동하며, 현지 점검, 지도감독 등의 철저한 현장 사업 관리를 지속하고 있음

표 2.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절차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시 · 도	시 · 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확정, 현지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성과 측정, 현지점검, 지도·감독 · 대상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검토, 사업시행 및 지원, 예산 집행 결산 등 · 현지 점검,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사업계획 수립, 대상자 검토, 사업시행추진,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 심의위원회 설치

자료 : 저자 작성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사업에서 주목할 사안은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임대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며, 향후 수산어촌 분야의 공유경제 모델에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됨
- 운영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 사업 명문화(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 공유경제모델의 투명성 제고: ‘00년 이후 보조지원을 용자 사업으로 전환, 시군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시 지역농업인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사업자(시군) 선정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 도시 내 지자체 주도의 공유 경제 모델로서 ‘마을지기 사업’은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유지관리 서비스 사업으로서, 주택유지관리서비스, 주택유지관리 교육 및 공구대여 서비스, 무인택배 등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운영하고 있음
- 마을지기 사업이 지자체 주도의 공유 모델로서 각광받은 주요 배경은 낙후된 단독주택지의 주거 복지 실현뿐만 아니라 집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공구 대여의 수익으로 지속적인 운영비를 일정 수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음
- 아울, 마을 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재료비 2만원 이하 무료, 출장비 무료 등)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 주도의 공유 경제 모델이 사회 복지, 지역 상생과 연계될 수 있다는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그림 4.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현황



자료 : 톡톡부산 네이버 포스트(<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99348&memberNo=1460956&vType=VERTICAL>) (접속일: 2020.08.24.)

- 마지막으로 농지은행의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 은행이 매입한 농촌 내 잉여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자의 농업으로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
- 임대기간: 5년 또는 10년

- 임차료: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농지 빌리기 사업 역시 지원·운영의 형평성 제고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와 사업 진입의 기준(일정 소득 이상인 자와 당초 소유자와 가족 관계가 있는 지원자 제외)을 마련하고 있음
- 농지의 다음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기간 만료년도에는 휴경하거나 타작물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측면은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유경제’ 모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 타 분야 공유경제 모델 검토

구분	개념	사시점
농기계임대사업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서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자자체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 및 운영비 지원)	· 공유경제 모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장치 마련(보조금 지원 탈피,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농업인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등)
마을지기 사무소	· 부산 지역의 공동주택 수준의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와 주민생활편의 서비스(공구대여, 교육, 택배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사업	· 지자체 기반의 공유경제 모델 운영으로 복지성 사업이 아닌 일정 수준의 운영비 확보 · 공유경제 모델 내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 마련 · 지역 내 복지 사업, 일자리 자원과 연계
농지 빌리기 (비축농지임대사업)	·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치 마련(소득 기준, 당초 소유자의 가족 배제, 다음 임차인 피해 막기 위한 조건 부여)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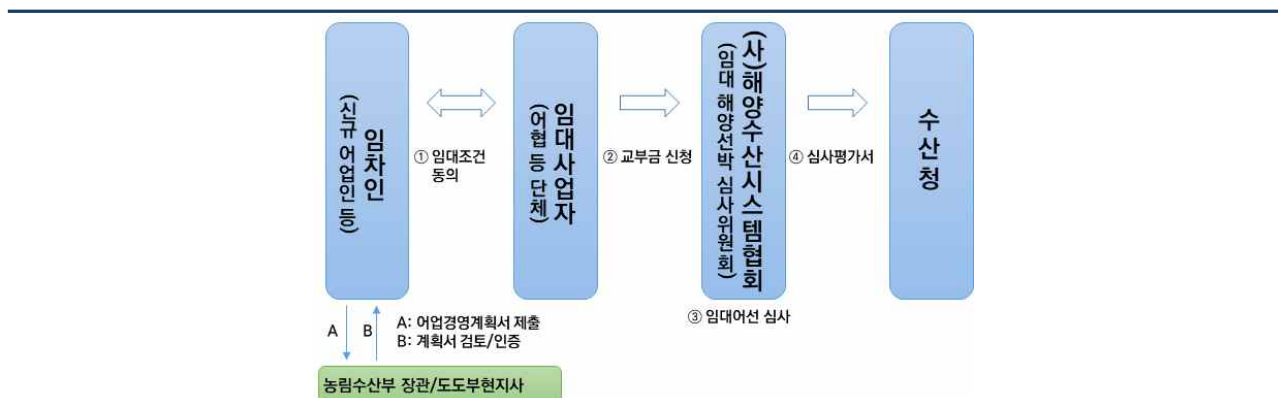
일본어선리스사업, 청년어업인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 민간협력기반의 촘촘한 어선리스사업 거버넌스 구축

- 일본은 1953년 79만 명이었던 어업인수가 2016년 16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어업종사자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향후 어촌지역이 인구소멸 및 어업인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2002년부터 신규 진입어업인과 재정난을 겪는 어업인과 노후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어선을 취득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육성하기 위한 어선 임대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음
- 2004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18척의 중고어선(원양참치연승어선 9척, 근해저인망어선 8척, 풍치봉수망어선 1척)을 개보수 및 건조하여 신규 어업인에게 어선임대사업을 실시함
- 이러한 어선은 신용능력이 없는 신규 어업인도 임차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어선구입이나 공적자금의 용자와 달리 어선사용에 있어 어업인 부담이 적어 신규 어업인에게 큰 관심을 받음

- 일본 어선임대사업을 위해 (사)해양수산시스템협회를 설립하여 임차어업인을 심사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어협 등 어업단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신규어업인과 재정이 열악한 어업인의 어선을 구입·건조하는데 약 480억 엔을 투입하여 3,000여척 임대어선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신규어업인 등은 어업경영계획서를 농림수산부 또는 도도부현지사에게 검토받아 도도부현 어협에 신청을 하고, 어협은 어선임대사업을 위임받은 (사)해양수산시스템협회에 임차어업인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교부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 교부금을 신청함
- (사)해양수산시스템협회는 임대어선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요령 및 심사기준을 밑바탕으로 임대계획 신청서의 첨부자료, 임대 보조금 신청 어선의 요건준수 등을 심사함
- 어선의 이용목적, 안정성, 선체 구조뿐만 아니라 조업과 관련하여 조업시 운항, 어로기계의 배치, 작업자 동선, 어획물 처리방법, 악천후시 선체 동요, 선체형상, 추진기관, 작업장 및 탈출경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심사함

그림 5. 임차어업인의 어선임대 신청 프로세스



자료 : (사)해양수산시스템협회(<http://www.systemkyokai.or.jp/osirase/lease/lease.html>)

■ 어업공동체 주도의 인큐베이팅과 민간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어업인의 맞춤형 지원

- 어업 전문가가 있는 어협에서는 어선을 구입·건조하여 어선을 관리하고, 신규어업인에게 어업기술을 이전, 멘토링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및 어촌정착을 돕고 있음⁵⁾
- 어선은 1년 단위로 임대계약하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어선엔진, 어구기계 등의 유지관리는 어협에서 관리하고, 어선보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임차어업인과 어협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있음
- 또한, 어협은 어선임대뿐만 아니라 어업기술을 교육하고, 어업과 관련된 멘토를 배치하여 어업기술 향상 및 안전한 조업활동에 노력하고 있음
- 쿠마모토의 김양식장에서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김양식 시스템선박을 개발하고, 개발된 선박을

5) NPO 수산·어촌 활성화 추진기구, 어선임대사업의 계약정보, 2016

신규 및 양식 어업인에게 대여하여 효과적으로 김양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⁶⁾

- 김양식은 10월말에서 2월 초까지 김을 채취하기 위해 4인 이상의 인력이 해상에서 작업을 하지만, 김양식 시스템선은 1인이 조정실 안에서 양식된 김을 채취하는 시스템으로 신규어업인이 쉽게 기술이전을 하고 있음
- (주)니찌모우(ニチモウ)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아 10척의 신규어선을 건조하여 운영 중으로 어업인 고령화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김양식 시스템 선박을 개발하고, 양식어업인과 신규 어업인에게 단기 및 장기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림 6. 일본 청년귀어인 우수사례(연승어선 및 김양식 어선)



자료 : 일본어선임대 우수사례⁷⁾ 2019, p.4, p.15

어선 · 어장 빌려주고 청년에게 손짓하는 어촌사회

■ 신안군 청년어선임대사업, 어촌형 공유경제 첫 사례로 주목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안군이 중고어선을 구입해 귀어인의 어촌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로 어선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어촌에 대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첫 사례로 꼽을 수 있음
- 어선임대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두 척의 근해 어선(24톤, 10톤)을 지자체에서 구입하여 신안군 어업인에게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년은 6척의 연안어선을 구입하여 운영
- 신안군은 자원감소로 타 지역에 매각을 하는 어선을 구입하여 신안군 내 어업활동을 원하는 신규어업인에게 10년간 임대해주고, 연간 0.5%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선박구입비용을 지불하여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게 하였음
- 신규 어업인은 약 5년이 내 임금과 경비를 제외하고, 선박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선임대사업의 확대를 통해 신안군 내 일자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6) (주)니찌모우 김양식 시스템 선박 관계자 인터뷰(2017.3.7.)

7) 일본어선임대사업 우수사례집의 내용을 정리

([http://www.fpo.jf-net.ne.jp/gyoumu/hojyogijgyo/10kyokajigyou/gyosenlease_files/%E6%BC%81%E8%88%B9%E3%83%AA%E3%83%BC%E3%82%B9%E4%BA%8B%E6%A5%AD_%E4%BA%8B%E4%BE%8B%E9%9B%86%E4%B8%80%E5%BC%8F\(%E4%BB%A4%E5%92%8C%E5%85%83%E5%B9%B4%E6%9C%88\).pdf](http://www.fpo.jf-net.ne.jp/gyoumu/hojyogijgyo/10kyokajigyou/gyosenlease_files/%E6%BC%81%E8%88%B9%E3%83%AA%E3%83%BC%E3%82%B9%E4%BA%8B%E6%A5%AD_%E4%BA%8B%E4%BE%8B%E9%9B%86%E4%B8%80%E5%BC%8F(%E4%BB%A4%E5%92%8C%E5%85%83%E5%B9%B4%E6%9C%88).pdf))

그림 7. 신안군 흑산도 어선임대사업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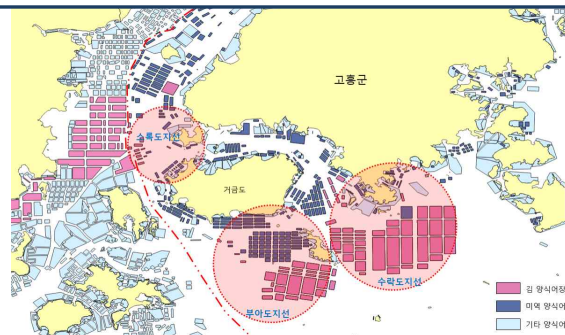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촬영(2020.8.12.); 연합뉴스(접속일:2020.8.24.)

■ 고흥군 청년어장공모사업, 신규 어업인을 위한 인큐베이팅 양식어장 개발

- 고흥군은 2017년 기존 감미역 양식 등 불법어장 60~70개소를 정리하여 어장을 확보하고 5개의 연안지선에 창업어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
 - 창업어장은 김양식이 가능한 소록도지선(220ha), 부아도지선(125ha), 수락도지선(100ha), 미역양식이 가능한 부아도지선(27ha), 가리비 양식이 가능한 고흥만지선(23ha) 등 총 500ha를 신규 어장으로 승인
- 고흥군 어가 평균수득은 2016년 약 7천만 원⁸⁾으로 신규 진입 청년어업인의 연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식어장을 분배하여 청년귀어인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양식 어업인으로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김 양식어장은 연안지선에 따라 1인당 소록도지선 20ha, 부아도지선 15.63ha, 수락도 지선 14.2ha, 미역 양식어장은 1인당 6.67ha, 가리비 양식어장은 1인당 2.78ha 총 46명의 신규 어업인을 위한 어장을 확보함
- 2017년의 도시청년은 고흥군 귀어창업 공모에 80명(김 60명, 미역 7명, 가리비 12명) 이 귀어를 신청 후 총 41명(김 29명, 미역 3명, 가리비 8명)이 선정되어 고흥군에서 어업활동 중에 있음
 - 도시청년 일부 초기사업 투자대비 소득이 높지 않은 이유 등으로 양식어업을 포기하였지만, 전체 46명 중 41명(89%)이 전반적으로 정착 및 어업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그림 8. 고흥군 김 양식어장 및 기타 양식어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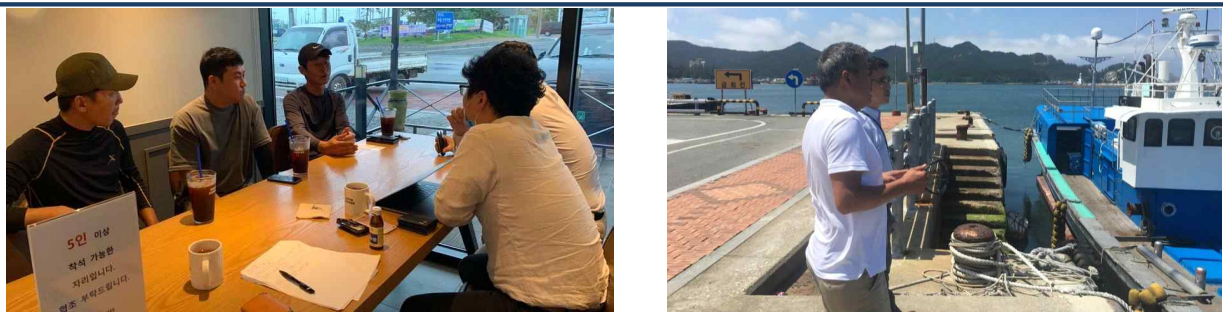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일보(접속일: 2020.8.20) ; 저자작성

8) 수협중앙회, 2016 어촌계 현황 및 분류평정의 내용 중 고흥군 어촌계 어업소득의 평균임

■ 어선·어장 공유경제, 시행방안 미비에 따른 보완책과 확대방안 마련되야

- 청년어선임대사업 및 청년어장임대사업은 어촌의 진입장벽을 낮춰 도시청년이 어촌 정착과 어업활동의 인큐베이팅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며, 도시청년 귀어인에게 장기간 동안(어선임대 10년, 어장임대 5년) 어업활동 기회를 제공함
- 이와 더불어 어촌지역에 진입한 도시청년을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업의 핵심기술 이전 및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기술경영에 대한 교육지도의 한계로 인해 실제 어업경영체 운영과 정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⁹⁾
- 양식어장은 소록도지선, 부아도지선, 수락도지선으로 환경여건이 동일하지 않고, 어장정보 획득의 비대칭으로 원주민이 아닌 귀어인의 경우 양식어장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고흥군 청년어장임대사업 및 신안군 청년어선임대사업 대상자 등 인터뷰



자료 : 저자촬영(촬영일 : 2020.7.29.; 2020.8.21.)

■ 어선·어장 공유, 신규 귀어인 육성 및 창업의 장으로 활용되어 어업인에게 어촌정착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 어촌분야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어선임대사업은 이제 첫걸음을 시작한 단계인 만큼 타 분야의 공유경제 사례를 토대로 청년 귀어인에 대한 사전준비 및 교육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등 임대사업자는 어선·어구의 구입비용뿐만 아니라 어선의 유자관리 등의 역할이 필요하며, 어선보험 등 어선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어업인, 마을 유희어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귀어에게 면허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임대함으로써 전문어업인으로 육성하고, 창출된 수익을 재투자하여 어선 및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 어선 및 양식어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투자된 기반조성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및 수협, 어촌계 등을 플랫폼으로 어선 및 어장을 청년 귀어인에게 단기 임대하여 어업교육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9) 고흥군 청년어장임대사업 인터뷰 내용(2020.7.29.)

빈집 활용 공유모델, 청년귀어인의 안정적 정착과 어업외소득으로 잠재력 높아

■ 빈집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 새로운 소비자 수요에 탄력적 대응

- 일본의 ADDress는 농어촌지역 빈집 문제, 노마드족 증가, 지역생활 동경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지역 내 주택(빈집)을 무제한으로 내 집처럼 쉬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월 4만 엔(약 45만 원: 세금 별도) 지불으로 ADDress가 운영하는 전국 내 농어촌 지방의 빈집 혹은 리모델링한 유희 별장에 무제한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임
- ADDress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농어촌에 거주하고 싶은 많은 잠재 이용객들의 ‘농어촌 완전 이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현저히 낮췄기 때문임
- 또한, 빈집의 사회적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의 어드레스 사업 ‘홍보’, ‘교통서비스 연계’도 큰 몫을 차지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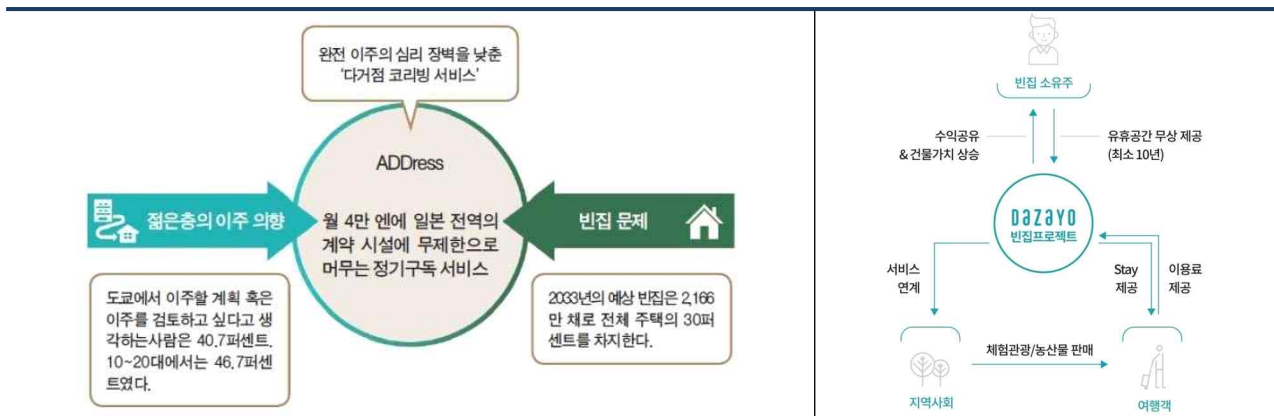
그림 10. 일본 어드레스(ADDress), (주) 다자요 사업 공간 이미지 예시



자료 : 나눔경제뉴스(접속일: 2020.8.13.); 다자요 홈페이지(접속일: 2020.8.12)

- (주)다자요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한 농어촌 공유숙박 스타트업으로,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다는 지역재생 측면과 단순 숙박이 아닌 지역 문화와 공존을 모태로 사업 모델을 발전시켜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지역 내 빈집을 발굴하여 회사가 전면 개조하는 대신 집주인은 10년 간 회사에게 빈집을 무상 임대를 해주는 방식(집주인과 투자금을 분담하여 매출을 나누는 구조도 상존)으로 설계됨
- 집주인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 부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사업 확장 없이 리모델링 및 공간 브랜딩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지역 개발 상생 모델 사례로 소개됨

그림 11. 일본 어드레스(ADDress), (주) 다자요 서비스 모델 개념도



자료 : 나눔경제뉴스(접속일: 2020.8.13.); (주)다자요 발표자료 중 일부 발췌

■ 빈집 활용, 기대만큼 우려도... 지속가능성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 선결되어야

-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공유 숙박을 주도한 (주)다자요는 2019년 7월,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되어 사업 운영이 중단됨
-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의 농외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성격으로, 사업 공간 내 농어업인이 함께 거주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빈집 문제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높았던 다자요 모델은 농어촌민박업 개정이나 규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숙박업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자요 측은 빈집 활용 숙박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걸음 모델’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적 허용을 요청한 상태이나, 숙박업, 농어촌 민박업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지역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함
- 검토된 사례와 같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유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유 경제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산물 판매의 채널 등을 연계한 상생 모델로 기능한다면, 지역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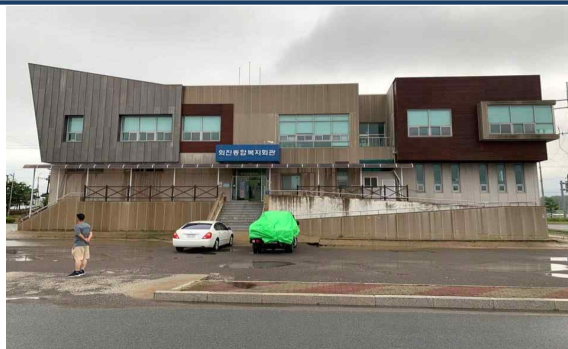
농어촌 생활SOC 자원사업, 공공성 주도의 공유경제 모델로 어촌 취약지역 이탈방지

■ 생활SOC 복합화, 주민 생활 기반을 넘어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로 기능

- 도시의 생활 여건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생활SOC는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 여가를 위한 중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장흥군 회진면 회진항의 구역 내 위치한 회진종합복지회관도 지역주민의 대표적 복합 생활 SOC로서, 목욕탕, 이발소, 강당(집회, 댄스강습공간 등), 음악연습실이 운영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적 공간 외에도 목욕탕, 이발소 등은 수익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임
- 이는 공공의 공간 내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용료를 매개로 한 대표적인 농어촌 공유모델이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 복지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에 지자체 지원에 용이해 오랜 기간 운영을 전제로 한 안정적 모델로 성장할 수 있음

그림 12. 장흥 회진면 생활SOC 복합화 사례



자료 : 저자 촬영(2020.7.23.)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취약지역의 일터 여건 개선 측면으로 지역주민 호응 높아

- 주기적인 어업용 기자재 관리는 어업인들의 해난사고 방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나, 도서 및 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해난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
- 이에 경남, 충남, 전남 등 전국 지자체 수산자원연구소나 수산안전기술원에서는 어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됨
 - 다양한 지자체 사업 중 충남 수산자원연구소의 이동수리소 사업은 어선 1척당 연 2회, 회당 10만 원 가량의 어업용 기자재 부품 무상 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호응이 높았던 기저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어업 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일조했기 때문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사업 지원은 특히 어업 진입에 대한 문턱이 높은 청년들에게 그 체감효과가 높을 것임
- 나아가 해당 사업은 기존 어업인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정부지원사업과 매칭하여 민간투자,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어촌사회의 공유경제 도입·정착을 통해 어촌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청년 귀어·귀촌인의 사다리가 되어야...

■ 어선, 어장, 주택 등 유희자원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활용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서둘러야

- 어촌사회 정착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귀어인들은 어선, 어장, 주택마련 등에 있어서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 구입하는 과정까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수산업의 경제활동 기반이 되는 어선, 어장과 정주기반(주택)의 유희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DB관리, 공유경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발굴 등 정책연구를 통해 청년들의 어촌사회 정착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어선, 어장, 주택 등 지역별·업종별 특성과 청년 수요에 기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가칭) ‘어업기반 공유경제 거래서비스’ 등 수산분야 공유경제 서비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초고령화로 인해 어업인력이 부족해 마을어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청년 마을어장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어업공동체와 청년들이 함께 마을어장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고려되어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수산분야 사업’의 성과평가와 시행과정의 오류 보완을 통한 확대 방안 마련

- 전라남도 신안군과 고흥군은 ‘청년어선 임대사업’, ‘청년 마을어장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특히,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어촌어항공단, 지자체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주)다자요와 같이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로 환경, 경관, 안전문제 등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과 기존 주택소유자 상생협력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가칭) 「수산업·어촌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자원기반 마련

-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귀어귀촌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기반 인프라와 정주기반 확보 등 수산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수산·어촌분야의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면허어장, 어선, 주거환경 등 기존 어업인의 기득권 형성과 현행 제도적 상충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등 지원기반을 포함한 (가칭) 「수산업·어촌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약칭 : 공유경제 활성화법)이 필요함

자료출처

박상우·이호림·이상규,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연구, 2017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201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일본수산청, 일본어선임대사업 우수사례집, 2019

나눔경제뉴스, 일본의 구독경제 성공기업 어드레스'ADDRESS' (<http://nanumy.co.kr/View.aspx?No=679435>, 접속일: 2020.8.13.)

네이버블로그, 고용경제의 현황과 그림자 (<https://blog.naver.com/hyoun1202/221470554689>, 접속일: 2020.8.21.)

아시아투데이, 공유경제 시대, 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1010006797>, 접속일: 2020.8.21)

연합뉴스, "청년 어부에 배빌려줍니다" 신안군, 전국 첫 임대사업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53800054>, 접속일: 2020.8.24.)

정보통신신문, 공유경제가 시장 성장 견인.. 기존산업 보완 효과도(<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85>, 접속일: 2020.8.21.)

쥬다자요, 홈페이지 (<https://dazayo.com/>, 접속일: 2020.8.12.)

한국일보, 양식어장 기술 전수·무료 임대 "바다에 창업할 청·장년 오세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141341662836>, 접속일: 2020.8.20.)

Platum, 구독경제는 공유경제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다 (<https://platum.kr/archives/139184>, 접속일: 2020.8.23.)

네이버 포스트, 주민 편의 서비스! 마을지기사무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99348&memberNo=1460956&vType=VERTICAL>, 접속일: 2020.8.24.)

(사)해양수산시스템협회, 어선임대사업내용(<http://www.systemkyokai.or.jp/osirase/lease/lease.html>, 접속일: 2020.8.20.)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회의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업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업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업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피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업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업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 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생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시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 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포용과 혁신중심의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6.22.
제172호	COVID-19에 따른 선원수급 및 선박검역 대책 마련이 시급	2020.07.03.
제173호	포클랜드 입어 정책 변화 예고, 국내 오징어 수급 대응 방안 마련해야 - 2020 한중남미수산물포럼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	2020.10.30.
제174호	공유경제, 청년귀어인의 어촌사회 진입장벽을 넘는 사다리가 되어야...	2020.11.6.

URL: <https://www.kmi.re.kr/>